

“광주 광산구체육회 임원 폭언·폭력 의혹, 엄정 처벌해야”

광주 광산구체육회 임원이 업무 지시 권한을 놓고 다투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갑질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을 제기한 노조측은 엄정 처벌을 촉구한 반면, 해당 임원은 언쟁 중 욕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맞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체육지도자 광주지회는 9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체육회 이사 A씨의 갑질 폭언·폭행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피해자 보호와 책임자 처벌 등에 미온적인 시·구 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 종목단체(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A이사가 지난달 17일 회의 도중 종목단체 승인 관련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이에 반발하는 종목 담당자인 생활체육지도자 B씨의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A이사가 ‘나 체육회 이사야! 머리가 나쁘면 사표 쓰고 나가라며 지위를 이용, 욕설·폭언도 했다’며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공개 사과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A이사는 사

공공연대노조 체육지도자 광주지회, 폭로·규탄 기자회견 해당 임원 “욕설 인정하나 오히려 집단 폭행 피해자다”

건 당일 폭행을 말린 B씨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맞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체육회 내 폭행에 대해 광산구체육회 책임자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한다”며 “종목단체 불화가 이미 예상됐지만, 체육회 다른 임원은 폭행을 방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가해자 A이사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오는 17일 열겠다고 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볼 때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자치구 체육회에서 소속돼 일상생활에서 전 연령층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며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시 체육회, 광산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 ▲시·구 체육회 갑질 근절 실태 조사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이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A이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협회장을 맡고 있는 종목단체에 대한 구 체육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다. 단체 승인에 필요한 서류(전임 이사 사퇴 불가 사유서 등)를 보완해달라고 사무국장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국장이 B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겼고, 이는 규정에 따른 합당한 업무 절차다”면서 “B씨가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해 반발, 회의 석상을 박차고 나갔다. B씨의 태도에 격분해 욕설 한마디 한 것이 전부다”라고 해명했다.

폭행에 대해선 “오히려 노조 소속 동료지도자 5명이 몸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체육지도자 광주지회가 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언·폭력 의혹에 휩싸인 광산구 체육회 임원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행사했다. 오른쪽 손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A이사는 “억울하다. 노조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왜곡적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추가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한산한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찾지 않아 9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민원 관련 소극 행정 도마위

광주 서구가 도심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에 따른 소음·비산 먼지 피해와 교통 혼잡 등 주민 민원을 소극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체라도 공사에 따른 인접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조정위원회 구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은 9일 의회 제 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

에서 “해당 공사장을 둘러싼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이 2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민원은 접수 한 달여 만에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행정 처분마저 충분치 않았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와 민원 내용을 짚었다.

대형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차도·보도 등 도로구조물 파손과 그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 무시’ 반말하고 수사 편의만 좇는 검사들 여전

인권 존중 수사 천명 무색...‘자정 시급’

수사 과정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사들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 존중 수사를 천명해온 검찰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2020년도 검사 평가에서 개선점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9일 발표했다.

광주고검·지검, 순천·목포지청 검사 168명(관외 포함)의 평균 평가 점수는 79.83점(수사 79.06점, 공판 80.98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검사들은 평균보다 30점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권 의식·진절성 ▲적법절차 준수 ▲성실성·신속성 ▲실득력·융통성 평가 항목에서 지적 사항이 많았다.

일부 검사들은 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였다.

검사가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반말·음박지름·비꼬기 등)를 보고도 방치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단에 의한 수사 진행, 회유·압박, 신병과 연결시킨 자백 강요 사례도 접수됐다.

기소 전까지 장기간 수사 지연, 경찰 수사 기록 미검토, 추가 수사 없이 사건 처분, 합리적 소명에도 보완 수사 소홀, 사실관계·법리 판단 미흡 등의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일부 공판 검사는 구속 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소송 절차 지연·기일 연기 신청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의 변경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형하거나 잦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으로 공판 과정의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검찰이 기소 단계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려다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에서 6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하고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부 검사가 변호인의

정당한 기록 열람 복사권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지검 목표지청은 올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잇따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행정 편의주의만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의 공정성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수사·행정 과정의 미흡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에 검사 평가에서 문제시 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조서 없는 수사’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진행된 광주변호사회의 검사 평가는 올해가 6번째다. 검찰권 행사 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평가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